잦은 사고…전남 연안 여객선이 불안하다

15개월동안 전국 사고 40건 중 절반인 20건 전남서 발생

선박 노후·항해 부주의 원인…화물선 사고도 끊이지 않아

연간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남 연안 여객선들의 사고가 끊이질 않는 등 불안한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선박 노후와 항해 부주의 탓으로 탑승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안 여객선들의 고장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해양수산부가 분기마다 공개하는 '선박의 안전도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개월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연안 여객선 사고는 모두 42건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20건이 전남 연안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11건, 목포 8건, 강릉·울릉도 7건, 인천 5건, 제주 4건 등이다.

특히 최근 4개월(지난해 12월~3월) 동안 전남 연안에서 11건에 달하는 연안 여객선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객선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는 줄리아아쿠아호가 고흥군 나로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우현 기관 이상으로 여수항으로 회항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신안페리5호가 신안군 장산면 축강항 인근 해상에서 조타장치 고장으로 다른 선박에 예인돼 목포항에 입항하는 등 사고 대부분은 선박노후화에 따른 기계 고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더존페리호가 지난 1월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 인근 해상에서 저수심 지역에 좌주되고, 대흥페리9호가 지난 2월 신안군 안좌면 소마진도 인근 해상에서 좌주되는 등 항해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리적 여건상 연안 여객선 운항이 높을 수밖에 없어 선박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연안 여객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5개 항로 143척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4개 항로 76척이 전남 연안을 항해하고 있다. 또 목포와 여수의 지난해 연안여객선 수송실적은 845만1531명으로 전국 수송실적(1538만931명)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선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해상에 추락해 숨졌고, 지난해 1월에는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리 인근 선착장 방파제공사 중 와이어 절단으로 인해 102백두호 선장이 숨지는 등 모두 4건의 사망사고와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노후 연안 여객선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선사 대부분이 영세해 당장 모든 여객선을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안 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세워 노후 선박을 교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교육부 섬 관사 보안 강화 대책 냈지만…

신규발령 자제·전수조사 등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 비난

섬마을 학부형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섬 관사 보안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교사들에 대한 도서벽지 신규 발령 자제 방안이나 관사 운영실태 전수 조사 등 실효성 없는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교사 거주 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사 운영 실태 뿐 아니라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가급적이면 신규 발령하지 않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 관사의 경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CCTV도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교육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사 주변의 CCTV 설치 현황과 방범창, 비상벨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시스템 관리 현황, 관사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와 보호체계 구축 여부, 관사에 거주하는 교사 현황 등을 점검한다.

교육계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남도교육청의 초등 신규 임용 교원 중 여성 비율이 65%에 달하는데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중기교육재정계획'에 교직원 현지 거주 유도를 통한 지역 교육 활동 활성화를 내걸고 '교직원 사택 개선'을 추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태껏 방치했다가 사건이 터진 뒤 내놓은 '뒷북'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교육청은 또 올 해 초·중·고등학교 안전을 위해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사업(47억)을 추진했다가 다른 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려 전액 반영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인사담당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단체 승객 안왔다며 여객선사가 출발 지연"

탑승객 40여명 1시간30분간 대기 큰 불편

선사 "표 못구한 승객 방해 탓"

단체 승객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객선사가 탑승객 40여명을 1시간30분 동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40분 목포여객터미널에서 신안 우이도로 향할 예정이던 섬사랑6호가 1시간30분 지연 출발했다.

A씨는 "이미 탑승하고 있던 40여명의 승객들 항의에도 출발하지 않던 배가 나중에 80여명의 단체 승객이 도착하자 곧장 출발했다"며 "선사가 처음에는 표를 구입하지 못한 승객들의 항의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전산 시스템의 오류로 매표 시스템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짓 방송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사와 여행사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40여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선사 대표는 "지연 출발한 것은 맞지만 단체 승객을 기다린 게 아니라 일부 표를 구하지 못한 승객들이 탑승을 방해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현장에 해경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7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외벽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걸어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교사 성폭행' 주민 2명 공모 가능성

범행 전후 2시간동안 6차례 통화 시도

20대 여교사를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섬마을 주민들이 범행 당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은 6일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2명이 범행 전후 2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49)씨, 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모(35)씨, 유치원 학부모인 김모(39)씨 등 피의자 3명 가운데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박씨의 연락을 받고 관사로 찾아갔다.

김씨는 이날 자정 전후에 박모씨에게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는 이유로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박씨는 받지 않았다. 박씨는 대신 범행 후 차를 몰고 관사를 떠나면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사 혼자 있는 관사로 가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가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대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와 김씨가 가게가 가까워 미리 상황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오피스텔 중복분양 피해 500여명으로 늘어

시행사-신탁사 공모 의혹 제기

비대위, 20여명 추가 고소

광주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오피스텔 사기 피해자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는 6일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약 전 실제 명의자(원분양자)가 누구인지 물었지만 신탁사가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중복분양을 주도한 시행사 측과 신탁사간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오피스텔 시행사(분양사)가 중복분양을 일삼던 시기, 피해자 상당수가 애초 분양가보다 할인된 분양가, 입금 계좌가 신탁사가 아닌 점 등이 의심스러워 신탁사로 전화해 '×××호 분양자 내지는 명의자가 누구인가'라로 문의했다"면서 "그런데도 신탁사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 불가'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막상 언론 보도가 터지자 돌연 실제 명의자를 공개하는 등 앞뒤가 어긋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대위가 파악한 500여명의 중복 분양 사기 피해자 가운데 수십명이 계약 전 신탁사 측에 문의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탁사 측이 모를 리가 있었겠느냐"며 경찰에 신탁사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분양건을 맡은 간부급 직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사기 공모 등 뚜렷한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 측이 지난 3일 경찰에 2차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500여명, 피해는 500억원(1000채) 규모로 늘었다. 피해자들은 신탁사 대표 등 관계자,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20여명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사기행각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 박모(57)씨 등 임직원 1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죄목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박씨 등 일당은 지난 2011~2013년 골든힐스타워 총 482세대 중 80% 이상을 호당 7000만~8000만원(22㎡)에 정상분양한 뒤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된 세대와 미분양 물량을 호당 4000만~5000만원에 중복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시행사 대표 어디에…10억 도피자금 마련 후 잠적한 듯

광주 최대 분양사기(비대위 주장)를 설계하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앤디도시개발 대표 박모(56)씨는 어디에 있을까.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고, 자금 회수를 통한 다소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사기단의 몸통격인 박씨의 체포가 시급하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사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비교적 빨리(5월23일) 출국금지와 수배조치를 취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3일 지인들을 만난 이후 종적이 끊겼다. 당시 박씨는 사채업자 등 지인들에게서 10억원 안팎의 현금을 도피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3명의 체포조를 꾸려 검거에 나섰지만, 단서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가 광주 주거지나 지인들의 거처에도 나타나지 않는데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등 추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노련한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지난 5월 도피 과정에서 A회장, B이사장 등 지인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짧게는 5년, 길게는 평생 감옥살이 해야 한다. 극단적인 생각도 하고 있다. 사업에 성공해 잘 보답하고 싶었는데 죄송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도 경찰의 수사에 일부 혼선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사 대표 박씨의 출국 흔적은 없다. 꼭 붙잡아 범행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광주경찰, 폭력배 100일간 특별단속…99명 검거

광주경찰이 폭행·갈취·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에 대해 100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해 99명을 검거했다.

이 중 조직폭력배 74명을 검거해 13명을 구속했고, 동네조폭은 25명을 붙잡아 8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대비 조폭 구속인원은 무려 225%(4→13명) 급증했다. 반면 동네조폭은 지난해보다 검거 35.8%(39→25명), 구속 27.2%(11→8명) 감소했다.

하지만 동네조폭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구속돼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직폭력배는 광역수사대가, 동네조폭은 일선 경찰서에서 맡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국내 최대 음란포털 '소라넷' 사이트 폐쇄 선언…결국 '항복'

쌍나팔

○…경찰 수사를 받아온 국내 최대 음란 포털사이트 '소라넷'이 공식 계정 격으로 사용하던 트위터를 통해 사이트 폐쇄와 트위터 탈퇴를 알리는 등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언.

○…6일 경찰에 따르면 소라넷은 이날 공식 계정 격으로 쓰던 트위터 아이디 '@soranet'을 통해 "소라넷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폐쇄하고 (트위터) @soranet 계정도 탈퇴한다"고 밝혔다는 것.

○…소라넷은 100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국내 최대 음란 포털로, 경찰은 최근 '몰카' 등 소라넷에 올라온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해외 핵심서버를 폐쇄하고 운영진을 검거하는 등 소라넷과 전쟁을 선포.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6타경194	1	북구 동림동 645 삼익 107동 10층 1003호 126.96㎡	아파트	193,000,000 193,000,000	
2016타경644	1	북구 군왕로51번길33, 1동 6층 607호 [두암동,동산훼밀리] 60㎡	아파트	92,000,000 92,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19078	1	북구 임동 76-26 159㎡	대	97,490,920	일괄매각.제시외
		북구 경열로181번길 41 47.27㎡ 부속건물 광 8.26㎡[현황창고및변소][주택과부속건물광은일반건축물대장상사용승인일자가기재되어있지않음] 제시외 창고 등 33.1㎡	단독주택	97,490,920	건물포함.제시외건물중주택과보일러실인접지76-27양지상소재로추정
2015타경20856	1	북구 두암동 385-2 179㎡	대	216,125,440	일괄매각.제시외
		북구 창판로138 1층101.115㎡ 2층88.945㎡ 부속건물 창고2.8㎡ 제시외 거실등 42.6㎡	단독주택	216,125,440	건물포함,목록2건물현황주택
2015타경23992	1	서구 쌍촌동 219-4 183㎡	대	149,104,660	일괄매각.제시외
		서구 월드컵4강로229번길 15-1 1층91.26㎡ 2층69.80㎡ 부속건물 변소 1㎡ 제시외 통로 등 43.5㎡	단독주택	149,104,660	건물포함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5타경22029	2	북구 풍향동 22-36 풍향동대주콘도㈜연립주택 3동 4층 403호115.9119㎡[복층형연립주택으로별도사용면적있음으로탐문조사]	다세대	178,000,000 178,000,000	건축물대장상면적115.9119㎡이나현황60평형으로통칭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18891	1	곡성군 겸면 대명리 256-1 129㎡	전	1,290,000 1,29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5타경18891	2	동소 산57 81322㎡[심상우의지분1/2전부]	임야	30,089,140 30,089,140	
2015타경21491	1	곡성군 죽곡면 삼태리 4 2413㎡[인접지와지적경계불명]	답	3,619,500 3,619,5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538 116㎡[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287,000	일괄매각.인접지와지적경계불명
		동소 539 469㎡[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1,287,000	
	3	동소 541 526㎡	답	2,786,000	일괄매각.인접지와지적경계불명
		동소 542 469㎡[물건번호3: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대상아닌수목식재되어있음]	답	2,786,000	
2015타경21705	1	곡성군 옥과면 수리 산156-1 16529㎡	임야	28,099,300 28,099,300	분묘소재,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015타경22890	1	광산구 소촌동 763 2159㎡	답	267,090,000	일괄매각.수목포함.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1,3현황목답
		동소 763-8 75㎡	답	267,090,000	
		동소 763-9 1558㎡[물건번호1: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위한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답	267,090,000	
2015타경64078	1	나주시 다도면 도동리 1254 2712.6㎡	답	30,652,380 30,652,3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126 2231㎡[채무자김계흥지분2분의1][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12,828,250 12,828,250	
[기타]					
2015타경13674	1	광산구 옥동 1235-5 2586.1㎡	공장용지	2,955,216,600	일괄매각.매각대상아닌제시외건물로인해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공장저당법제6조기계기구목록별지기재와같음
		동소 1235-6 3309.3㎡	공장용지	2,955,216,600	
		광산구 평동산단로 239-31 [옥동,가동] 1323㎡ 부속건물 공장 1층203.75㎡ 2층210㎡ 공장150㎡ 제시외 기계기구[분체정전도장라인외][기계기구매각포함]	공장		
		동소 239-31 [옥동,나동] 820㎡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6. 6. 22.[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6. 6. 29.[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7.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계수